

출범은 했는데 수사는 언제...광주중수청 과제 산적

간부 부임지 연휴 직전 통보에 인사 혼선
예산·관사·월세 지원 기준도 아직 미확정
사건 이관도 아직...본격 수사 착수 지연
임은정 “시민 양해...가능 범위 부분가동”

지난 2일 출범한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인력·예산·주거 등 초기 시스템 부족으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전남·광주·전북뿐만 아니라 제주까지 수사를 전담하는 새 조직이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체계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광주지방중수청으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곳이다. 큰 방에 수십개의 책상과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시스템이 정비됐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미흡한 개청 준비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수청의 정상 가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최선을 다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분청과서울청 등을 둘러본 상황도 전했다. 그는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한두 달 안에 조직을 정상화하기도 쉽지 않다. 예산 관련해서도 지난 연휴 계속 분청 차장, 지역 청장들과 지속적으로 상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앞에서 출근길 악식 문답을 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이 같은 준비 부족은 광주청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중수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5급 이상 간부들은 부임지를 연휴 직전인 지난주 목요일에 통보받았고, 연휴 기간 기자표를 구하지 못해 금요일에 휴가를 쓰고 광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타 지역에서 광주로 발령받은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관사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월세 지원 대상과 규모, 관련 예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다. 거주 대책 마련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일부 직원들도 고시원을 알아보는 등 당분간 저렴한 숙소에서 지내

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수사 업무 역시 아직 시작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임 청장은 “검찰에서 광주중수청으로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 일부만 알고 있을 뿐, 이관될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

다”고 밝혔다. 공소청에서 따로 넘어온 사건도 이날 오전 기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 전체가 완비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 기능부터 가동하는 방안을 분청 및 다른 지역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전북·제주까지 관할함에 따른 원거리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출장조사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민이 불편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불편한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수요나 지역 주민 요구에 따른 지청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분청 단위나 지역 주민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중수청장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전남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는 그는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도 흔들림 없이 씩씩하게 가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갈 길이 여전히 먼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임 청장은 전남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그는 김 후보자가 과거 논란이 된 사안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제가 알기로는 이익제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지 생각해야 하고, 중수청에서는 다시는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3년째 먼지·침수 피해”...첨단3지구 주민들 보상 촉구

장성 월정·고내마을 주민 트랙터 시위
“성토 높아져 침수 위험 커졌다” 주장
도시공 “90cm 계획 동일...위험 경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와 장성군 경계에 조성 중인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두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3년 넘게 공사 피해를 겪고 있다며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오전 장성군 진원면 월정마을 인근 첨단3지구 공사현장에는 ‘월정마을 주민 피해 주고 광주시·건설사만 배불리나’, ‘월정·고내마을 주민 피해 보상하라’ 등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월정·고내마을 주민들은 전일부터 트랙터와 차량 등을 동원해 첨단3지구 A5-A8블록 공사 구간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지난 3년여

간 공사로 비산먼지와 소음, 우회도로 이용에 따른 교통 불편과 차량 피해 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당초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마을 인접 도로를 기존 도로보다 0.9m 높게 성토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 약 2m 높이로 조성되고 있다며 침수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에는 월정마을 도로가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겼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시위로 덤포트럭의 현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이날 공사는 일시 중단됐고 주민들도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권오산 월정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3년 넘게 공사 피해를 겪었고 앞으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또다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성토 높이와 침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월정마을 인접 도로의 계획고는 당초 안내한 대로 기존 마을도로보다 약 90cm 높고, 주민들이 지적한 2m 성토구간은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학림천 좌안 계획도로”라고 반박했다.

또 침수 우려에 대해서는 첨단3지구 내 우수가 학림천을 거쳐 영산강으로 방류되도록 배수 체계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학림천 확장·정비와 월정마을 앞 우수암거, 배수관로 3곳을 신설하는 등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는 “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이었던 월정·고내마을의 침수 위험은 이 전보다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찬용 기자

주점 메뉴에 ‘피 떡갈비’...5·18 비하 논란

누리꾼들 “희생자 조롱 표현”
5·18재단 “책임 피할 수 없어”

전남광주 한 주점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메뉴 이름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스레드’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최근 문을 연 한 주점의 메뉴명을 문제 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된 사진에는 해당 주점 메뉴판에 ‘피 떡갈비’라는 이름과 함께 구운 떡갈비 3조각에 케첩을 곁들인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메뉴명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음식에 피떡을 안 붙인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자신을 업주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같은 음식이라도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 정한 이름이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 줄 알았다”며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맥락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월 단체 관계자들은 비하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피 떡갈비라는 표현은 주로 일베 등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다”며 “해당 표현의 의미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고통과 상처를 줬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상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